

「 2020년 1월 18일 시행 」

##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문제 책형
A

### 【인문사회계열 : 필수과목】

제 1 과목	제 2 과목	제 3 과목
헌 법	한 국 사	행 정 법

####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1. 시험지 표지의 ‘문제 책형’을 확인하고,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답안지의 책형란에 ‘시험지 책형’을 표기하십시오.
3.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의 ‘과목 순서’, ‘페이지 수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4. 시험 문제를 주의 깊게 읽고 문항의 취지에 맞는 하나의 정답만을 선택 하십시오.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중앙소방학교**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 【 헌 법 】

###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2.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②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③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 3. 조약 및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헌법재판소는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5호」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판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④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된 것도 아니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없다.

4.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헌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와 내용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헌법상 주된 지위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는 것과 그 보좌기관인 지위에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으면 「정부조직법」상의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총리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5.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자가 국회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 ②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전직대통령이 된다. 다만 전직대통령이 없는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6. 재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비는 총액으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년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할 수는 있으나 집행할 수는 없다.
- ④ 예산과 법률은 별도의 형식으로 존재하므로, 법률에 예산 집행의 근거가 없어도 정부는 그 예산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7.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할 수 없다.
- ②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④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8.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②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③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 ⑤ 직업선택의 자유에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9.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 ③ 공무담임권은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여러 가지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④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0.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 ③ 입영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 즉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④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 ⑤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11.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④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위원의 소개를 얻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청원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지만, 의원 모두가 소개되기를 거절한 경우에 청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 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12.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함께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함께 준용된다.
- ②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서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위원은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13.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 ③ 법률상 권한침해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부수적 규범통제를 진행하여 권한의 근거규범인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④ 현행 사법제도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극적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인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5.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 ② 국민들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 ⑤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16.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② 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 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심의권이 위임된 것이다.
- ⑤ 다수결의 원칙이나 회의공개 원칙 등과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입법절차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17.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④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8.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②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헌법 제110조 제1항의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③ 대법원장은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와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령으로 정한다.
-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③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④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20.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법관의 독립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 ② 법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 ④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2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⑤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므로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2.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 ③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④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임의동행한 피내사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된다고 본다.



23.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 ②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1960년 헌법에 삽입된 이래 그의 법적 성격과 보장 내용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가져온 기본권 조항이며, 아직도 그 내용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헌법규정에 속한다.
- ③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포함되어 있다.
- ④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는다.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 ②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 ③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그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④ 야간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대인의 근무·학업 시간이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⑤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하여지는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25.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협정의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②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 ③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지정재판부는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한다.
- ④ 위헌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무효 여부는 당해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 조항에 근거하였던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 ⑤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조항이 혼시규정임을 전제로 한 소송실무가 정착되어 있다면, 그 조항이 혼시규정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다.

# 【 한국사 】

1. 밑줄 친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공주 석장리와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는 이 시대에 제작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당시 인류는 밀개와 찌르개 등 쓰임새가 정해진 도구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① 명도전을 사용하였다.
- ②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았다.
- ③ 대표적인 도구로 주먹도끼를 제작하였다.
- ④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만들었다.
- ⑤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보관하였다.

2. 다음 자료의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터졌구나, 터졌구나! 조선 독립의 소리  
10년을 참고 참아 인제 터졌네.  
3천 리 금수강산 2천만 민족  
살았구나, 살았구나! 이 한 소리에  
만만세! 조선 독립 만만세! 대한 만만세! 대한 만만세!  
- 「배달의 맥박」 -

- ① 신간회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 ②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 ③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시작되었다.
- ④ 순종의 장례일을 기점으로 일어났다.
- 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3.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을/를 설치하고 삼남·해서·관동의 5도에서 비로소 삼수미를 거두어 병식(兵食)으로 삼았다. 삼남은 매 1결에 쌀 1두 2승을 거두고, 해서와 관동은 쌀 2두 2승을 거두어 호조에 소속시켰다.  
- 『만기요람』 -

- ① 서애 유성룡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 ② 김종서의 지휘하에 6진을 개척하였다.
- ③ 임진왜란 이후 국정 전반을 주관하였다.
- ④ 선무군관에 대한 군포 징수를 담당하였다.
- ⑤ 한양의 내영과 수원 화성의 외영으로 구성되었다.

4.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칭 평장인 반성·사유·관선생·주원수 등이 십만여 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삭주를 노략질하였다. …(중략)… 왕이 복주에 도착하여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교서를 내려 파견하였다.

- 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② 사림원을 설치하여 왕명 출납을 담당하게 하였다.
- ③ 신진 사대부의 진출을 억제하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 ④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 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 ① 군대 해산 조치의 근거가 되었다.
- ② 경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 ③ 헤이그에 특사가 파견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한 일본의 강요로 체결되었다.
- ⑤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은 씨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꺼리는 것이 많아 병을 앓거나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다시 새집을 지어 산다. 삼베가 산출되고, 누에를 쳐 옷감을 만든다.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 소, 말로 배상하게 한다. 이를 책화라 한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 ②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③ 전쟁이 일어나면 소의 발굽으로 짐을 졌다.
- ④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다.
- ⑤ 가족이 죽으면 뼈를 추려 공동 무덤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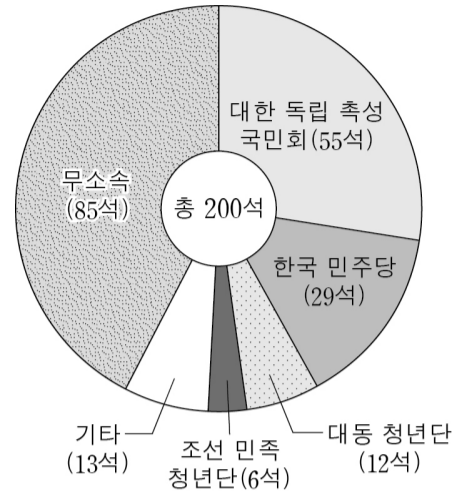
7.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은/는 궁예를 섬겼는데 시기가 많고 포악한 임금이 삼한(三韓) 땅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 그의 공이었다. …(중략)… [가]은/는 즉위 직후, 김부가 아직 복속해 오지 않고 견훤이 아직 항복해 오기 전이었는데도 자주 서도(西都)에 행차하여 친히 북방의 국경 지역을 순시하였다.

<보 기>  
 ㄱ. 흑창을 설치하였다.  
 ㄴ. 사심관을 임명하였다.  
 ㄷ.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ㄹ.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과 같이 구성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한일 협정을 비준하였다.  
 ㄴ. 4·19 혁명 이후에 구성되었다.  
 ㄷ. 2년 임기의 단원제로 운영되었다.  
 ㄹ.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당이 사신을 보내 올해 10월에 안록산을 공격할 것이니 기병 4만을 징발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흠무는 이를 거절하였다.  
 (나) 측천무후가 이해고를 시켜 대조영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대조영은 고구려와 말갈 무리를 연합하여 당에 대항하였다.  
 (다) 장문휴가 등주 해안에 상륙한 뒤 병사들에게 진군 명령을 하달하였다. 등주자사 위준은 급히 군대를 모아 이에 대항하려 했으나 전사하였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 ⑤ (다) - (가) - (나)

10. 밑줄 친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자들에게 무력과 폭력의 포기를 요구하고 그 대신 남과 북이 각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2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나의 뜻에 따라서 평양을 방문하여 …(중략)… 역사적인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 ① 유신 헌법 체제에서 발표되었다.
- ② 닉슨 독트린 발표에 영향을 주었다.
- ③ 남북 조절 위원회의 설치를 가져왔다.
- ④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다.
- 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11.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서경 유수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켜 중부(仲夫)의 무리를 토벌하려고 하자 절령 서쪽 40여 성이 모두 호응하였다.  
 (나) 방호별감 낭장 김윤후가 군사들에게, “만일 힘을 다해 싸운다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관작을 제수하겠다.”라고 격려하고, 관노의 호적을 불태워 민음을 보였다. 또 노획한 말과 소를 나누어 주자 사람들이 모두 죽기를 맹세하여 싸웠다.

- ①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 ② 대위국이 수립되었다.
- ③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 ④ 삼별초가 진도로 근거지를 옮겼다.
- ⑤ 김보당이 의종 복위 운동을 일으켰다.

12.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왕 13년 여름 6월 우산국(于山國)이 항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 …(중략)…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우산국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또 사나워서 힘으로 복속시키는 것이 어려우나 꺾이는 복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의 해안에 이르러 거짓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자,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곧 항복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병부를 설치하였다.
- ② 태학을 설립하였다.
- ③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 ④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 ⑤ 왕호를 마립간으로 고쳤다.

13. 다음 포고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소련인민위원대표자회의와 볼셰비키 전소련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일본의 간첩 행위 침투를 차단하기 위하여 극동 지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극동의 국경지대, 즉 포시에트 …(중략)… 블류헤로보의 모든 고려 주민들을 추방하여 남카자흐스탄주, 아랄해와 발하시 지역,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이주시키도록 명한다. 추방은 포시에트 구역과 그로체코포에 이웃해 있는 구역들로부터 시작한다.

	(가)	(나)	(다)	(라)	(마)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	자유시 참변	미쓰야 협정 체결	만주국 수립	민족혁명당 결성	진주만 사건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은/는 청에 사신으로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임하경륜을 저술하였다. 그는 기술 혁신과 문벌 제도의 철폐 등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 강조하였다.

- ① 중화 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에 기여하였다.
- ② 동국지리지에서 삼한의 위치를 치밀하게 고증하였다.
- ③ 과농소초에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④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 ⑤ 우서를 저술하여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강조하였다.

15.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조선 혁명자들은 이 정의로운 전쟁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 나아가 중국 항전을 조국 독립 쟁취의 기회로 삼기 위해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기치 아래 일치단결하였다. ... (중략) ... □(가)의 임무는 매우 중대하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식민지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천백만 조선 동포의 민족적 각성을 일깨우고 이들을 □(가)의 깃발 아래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①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 ② 쌍성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 ③ 3부 통합 운동에 따라 결성되었다.
- ④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 ⑤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16.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선문 가운데도 원돈신해(圓頓信解)의 여실한 언교(言敎)가 황하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러나 그것을 일러 사구(死句)라 하는 이유는, 사람을 지적인 이해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장애를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
- 여러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모두 그렇다 하며 말하길 “훗날 이 언약을 이루어 숲속에 은거하면서 동사(同社)를 맺을 수 있게 된다면 마땅히 그 이름을 정혜(定慧)라 하자.”라고 하였다.

- ①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 ②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③ 돈오점수를 강조하였다.
- ④ 백련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 ⑤ 대승기신론소를 저술하였다.

17. 밑줄 친 '새로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하는 아주 넓다. 안으로 중국에서부터 밖으로 사해(四海)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몇천 몇만 리인지 알 길이 없다. 이를 줄여 몇 자(尺)의 화폭에 천하를 그리려 하다 보니 상세히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다. ... (중략) ... 이번에 이회가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강하고 확대하였으며, 일본의 지도를 덧붙여 새로운 지도를 완성하였다. 반듯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니 문밖에 나서지 않고도 세상을 알 수 있다.

- ① 세종 대 편찬 사업의 결과 제작되었다.
- ②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 지도이다.
- ③ 불교식 세계관을 반영하여 오천축국을 표현하였다.
- ④ 지도의 모든 도로에 10리마다 간격을 표시하였다.
- ⑤ 서양 지도의 영향을 받아 경선과 위선이 표시되었다.

18.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금일 급무가 □(가)을/를 막는 것이라 하고, 그 방법으로는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략)… 전하는 □(가)의 무심하던 마음을 자극하고 아무 일도 없던 미국에 일을 만들어 주며 왜구를 불러 전쟁을 자초하여 일부러 살을 깎아 부스럼을 만드시렵니까.  
- 「영남만인소」 -

- ① 용암포를 강제로 조차하였다.
- ② 경의선 부설권을 확보하였다.
- ③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④ 운산 금광 채굴권을 차지하였다.
- ⑤ 조선에 외교 고문 필렌도르프를 파견하였다.

19.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마진중이 흥선 대원군을 결박하라 호령하고 그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곧 가마에 태워 힘세고 날랜 장정 한 패에게 마주 들게 하고 후문으로 빠져나갔다. 속히 동작나루를 건너 마산포에 이르러 배에 태우고 떠났다.  
- 『매천야록』 -

(나) 청의 제독군문 원세개가 대궐에 들어와 호위하였다. 일본 병사들은 물러가고 고종은 북궐묘로 이어하였다. 홍영식과 박영교는 처형되고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등은 일본인의 도움을 받아 도주하였다.  
- 『매천야록』 -

- ①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 ②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 ③ 청일 양국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였다.
- ④ 운요호가 강화도에서 무력시위를 하였다.
- 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20.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반포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4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① 중국과의 국교가 수립되었다.
- ②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 ③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창설되었다.
- ④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 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2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인이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 등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하니, □(가)이가 아뢰기를, “지금에 출사하는 일은 네 가지의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하는 것이 한 가지 옳지 못함이고,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두 가지 옳지 못함이고,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왜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탈 것이니 세 가지 옳지 못함이고,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은 아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들은 역병을 앓을 것이니 네 가지 옳지 못함입니다.”라고 하였다.

- ① 사람을 등용하여 훈구를 견제하였다.
- ②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 ③ 집현전을 폐지하고 6조 직제제를 시행하였다.
- ④ 규장각을 육성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⑤ 복인 세력을 기반으로 전후 피해를 복구하였다.

22. 밑줄 친 '지난해'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고난과 시련이 중첩했던, 실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중략)… 우리는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중화학 공업을 계속 건설해 냈고, 54억 불을 넘는 수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체 속에서 맴돌고 있었으나 우리만은 8.3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 ① 신한공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농민
- ② 포항 종합 제철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 ③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을 관람하는 학생
- ④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운영 과정을 보고하는 관료
- ⑤ 한국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

23.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은/는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가져가 야스쿠니 신사 한구석에 세워 두었다. 한국의 요청에 따라 2005년 한국에 돌아왔고, 이듬해 원래 있었던 함경북도 길주로 옮겨졌다.

- ①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음을 보여 준다.
- ② 진흥왕이 획득한 영토의 순수(巡狩)를 기념하여 건립하였다.
- ③ 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웠다.
- ④ 정문부가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⑤ 윤관이 동북 9성을 쌓고 고려 국경임을 알려 주 고자 건립하였다.

24.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이지,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그 발전 과정의 완만한 템포, 문화의 특수적인 농담(濃淡)은 결코 본질적인 특수성이 아니다.

- ① 진단학보 발행에 참여하였다.
- ② 식민 사관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 ③ 열을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④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 ⑤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25.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미소 공동 회담은 3월 21일 1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감격적인 막을 올렸다. …(중략)… 완전 자주독립을 삼천만은 기다리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아놀드 소장, 소련 측에서는 스티코프 중장 등이 참석하였다.  
 (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개원식이 의사당으로 개수된 군정청에서 거행되었다. 참석 예정인원 84명 중 의장 김규식 박사 이하 57명이 출석하였고 한민당계의 의원은 전원이 불참하였다.

- ① 좌우 합작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② 조선 인민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 ③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이 일어났다.
- ④ 평양에서 남북 협상이 진행되었다.
- ⑤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 행정 법 】

1. 행정행위와 행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② 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매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시행기간 내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 승인 등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임명 및 면직은 행정처분이다.
- ④ 수익적 행정행위에 철회원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철회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 ⑤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당해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 ②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 ③ 구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매각권유의 지시)가 위헌이라면, 주거래은행의 권유로 매각조건에 관한 오랜 협상을 통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의 행정지도는 강박이 되고 당해 주식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④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행정지도는 그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따른 면직처분 전까지 철회할 수 없다.
  - ㄴ. 납골당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요하다.
  - ㄷ.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 ㄹ.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더라도 행정관청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ㅁ.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 변경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ㄷ, ㅁ
- ④ ㄱ, ㄴ
- ⑤ ㄴ, ㅁ



4.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은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인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 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②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의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이행할 수 없다.
- ④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⑤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6.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대한 것이다.
-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 ③ 당사자등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간접적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 ② 고시(告示)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 ④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면, 그 처분이 후행처분의 가중적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8.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있다.
- 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 ㄷ.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 결정은 무효이다.
- ㄹ.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ㅁ.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점용불허가결정을 이유로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⑤ ㄴ, ㄷ, ㄹ

- ②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6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인근 주민의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 그 부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위법한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④ 해제조건의 경우에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지만, 부담의 경우에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은 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된다.
- ⑤ 부담은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으며,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부가할 수 있다.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등확인심판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의해서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재송이나 무효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으로도 다룰 수 있다.
- ②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의미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③ 하자의 승계에 있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
- ④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⑤ 정당한 권한 없는 구 환경관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1.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 ③ 법률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동의요건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15. 행정법의 효력 및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정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이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부터는 개정된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등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 ③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의 단기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은 공법상 금전채권에만 적용된다.
- 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16.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전의 영향 검토에 관한 구 「문화재보호법」 제7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 협의’는 ‘문화재청장과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구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③ 행정청은 독립적인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대외적인 권한행사의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
- ④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 ⑤ 대리권행사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에게 귀속되며, 대리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은 피대리행정청을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17. 경찰행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이다.
-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보호조치 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조치된 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거부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⑤ 군(郡) 도시과 단속계 요원인 청원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위반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서 적용될 여지는 없다.
- ②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⑤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9.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 요구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이며, 또한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 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감의 징계요구권은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된 ‘재산’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와 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가에 대한 것은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고,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리고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는 국가사무이고, 교육능력개발평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에 해당된다.
- ②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③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⑤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소송에서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공기관에게 청구대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한다.



21.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에 대한 수출추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③ 수사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이 실시한 여성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그 방식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였다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후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된 사안에서, 그 전보인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⑤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22.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시 후에 시로부터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공장부지가 수용되었다면 휴업보상의 대상이 된다.
- ③ 공익사업과 이로 인한 손실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손실보상의 대상인 손실이 된다.
- ④ 지장물인 건물이 구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한다.
- ⑤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국가공무원 甲은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에 이르렀고, 이에 A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와 별도로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소속기관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
- ②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행사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③ 甲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면허취소처분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징계처분 및 형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4.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그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5.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란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에 관한 위법뿐만 아니라 내용에 관한 위법도 포함한다.
- ② 인용재결의 당부를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송에서는 재결청이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원인 사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처분에 대한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다.
- ④ 처분이 아닌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한 경우 이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